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추진전략과 전망

류 기 철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누리사업’ 성공의 관건은 경쟁력 있는 인력의 양성과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의 창출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대학과 여타 지역 주체들 간의 협력 및 연계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I. 머리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6월 16일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일명 누리사업)의 지원 대상사업단을 선정, 발표하였다. 선정된 사업단의 수는 총 111개로서 이는 신청서를 제출한 전체 사업단 454개의 24%에 해당한다. 이를 사업당 지원규모별로 보면 대형사업(지원액: 30~50억 원)과 중형사업(지원액: 10~30억 원)이 각각 25개, 그리고 소형사업(지원액: 10억 원 이하)이 61개이다.

누리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방대학의 특성화 발전, 둘째, 우수한 지역인재의 양성 및 이를 통한 지역발전 촉진, 셋째 지역혁신체제의 토대 구축이다. 즉, 누리사업은 참여정부가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한 국가균형발전을 달

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대형 및 중형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및 해당 지역의 산업체의 참여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대형 사업의 경우 정부가 수립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상의 시·도별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였다. 그 결과 대형사업의 경우 각 지역의 전략산업과 관련을 가지는 사업들만 선정될 수 있었다. 부산의 ‘지식기반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한국해양대학교 외 3개 대학 참여)’, 충북의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충북대학교 외 3개 대학 참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업단의 구성과 관련하여 각 지역의 대학뿐 아니라 지자체, 산업체,

연구소, 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되 다만 대학이 사업시행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를 주문하였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의 수는 총 241개 지방대학의 46%에 해당하는 112개(대학 79개, 전문대학 33개)이다. 이들 대학들은 앞으로 5년 동안에 걸쳐 연간 총 3,000억 원 규모(단, 시행 1차년도에는 2,200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시도별 지원금액은 각 지역의 인구, 대학생 수, 산업체 종사 근로자 수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그 개략적인 규모가 미리 결정되어 있었으며 이렇게 각 지역에 배분된 지원액의 범위 내에서 소위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따라 지역별 경쟁을 통해 대상사업이 선정되었다.

II.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1. 추진 배경 및 대상 선정

최근 세계적으로 국제화와 함께 지역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사회 각 부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요구가 생겨나고 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함에 있어서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즉, 오늘날의 대학은 다양한 형태로 분

출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편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지역발전은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즉, 특정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지역발전은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학은
 교육과 연구라는 전통적인 기능 및
 그 내용을 새로운 요구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지역의
 여타 주체들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은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경우 지역대학의 중요성은 더욱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학은 교육과 연구라는 전통적인 기능 및 그 내용을 새로운 요구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지역의 여

타 주체들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스웨덴에서는 1997년에 고등교육기관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대학들에게 교육과 연구라는 본래의 책무에 더하여 외부와의 협력 및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1997년에 발간된 영국의 한 정부보고서에서는 “지역에 대한 책무가 향후 20년의 기간 동안 고등교육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각 교육기관은 사회와의 협약의 일부로서 이러한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하였다. 한편 최근에 와서 대학과 여타 지역주체간의 협력에 대해서는 대학뿐 아니라 지역의 경

제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예컨대, 영국의 지역발전청 : Regional Development Agency)을 포함하는 이들 지역주체들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경쟁력에 대한 대학의 기여도가 매우 낮으며 또한 지방소재 대학들의 경쟁력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는 사실이 누리사업을 시행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 졸업생의 취업률 저하와 신입생 유치의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소재 대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방대학의 어려움이 지역 산업체의 수요와 거리가 있는 교육내용 및 해당지역에서 배출된 인력이 취업할 수 있는 지역 기업의 부족 내지는 취약성에 기인한다는 인식 하에 대학과 기업체 및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졸업생의 취업기회의 확대와 함께 각 지역의 산업발전을 동시에 도모하여 지역의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이번 누리사업의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참여대학과 여타 산업체를 포함하는 협력기관 간의 협력이 얼마나 긴밀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업계획이 지역의 경제·사회적 여건 및 해당 광역시·도의 발전전략과 얼마나 잘 부합하는가 등이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누리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였으며 아울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을 천명하고 있다. 사후관리의 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 내에 4년제 대학이 하나 밖에 없는 관계로 경쟁없이 대형과제가 선정된 울산과 제주의 두 개 지역 해당대학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하여 재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다른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각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확보하기 위해 각 사업에 대해 별도의 컨설팅을 실시하고서 이를 기초로 기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둘째, 선정된 사업단에 대한 현장실사를 8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만약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철회할 예정이다. 셋째,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가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단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아예 탈락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다.

2. 성공적인 추진전략

누리사업은 이제 막 출발선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물론 선정된 사업들의 성공적인 수행을 확보함으로써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누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대부분 대학과 지자체 및 산업체간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지역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과목의 도입 등 교과과정의 개편을 사업의 중요한 수행전략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책을 정리해 보면 다

음과 같다.

- 1)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누리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대학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를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겠지만 대학과 지자체 간의 일관적인 역할관계를 고려할 때 이들 두 주체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대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내지는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등 여타 부처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교과과정의 개편 또한 간단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된다. 우선 대학들이 지역의 관련산업체를 광범위하게 접촉함으로써 지역 산업체의 분야별 인력수요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산업체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 개편작업에 있어서 산업체와의 긴밀하고도 지속적인 의견교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새로운 교과목의 도입이나 교수방식의 변경 등이 관련법규나 대학 내부의 반대로 인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는 것

누리사업에서는 대학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별 사업단에 다수 대학의 참여를 권장하였다. 이들 대학들 간에 실질적인 협력과 제휴가 이루어질 때 해당 사업의 성공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대학간 협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필요하다.

- 3) 일단 교과과정의 개편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의 원활한 운영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필요한 것은 강의를 담당할 교수인력의 확보이다. 기존의 교수나 새로 임용되는 전임교수가 새로이 도입되는 교과목의 강의를 맡는 경우 별 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겠으나 산업체 인사 등 외부강사를 채용하거나 강의가 다른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강의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이 도입되는 프로그램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된 전체 학생이 아닌 일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해외 어학연수나 현장연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4)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누리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시행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산업자원부나 과학기술처 등 관련부처로부터의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다른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각

- 지역의 발전이 촉진될 때 누리사업의 성공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 5) 각 사업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에 대한 지역의 수요가 충분할 것인지의 여부가 해당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사항이다. 이는 지방경제의 어려움이나 지방대 출신학생들의 낮은 취업률의 원인이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인력의 경쟁력이 낮아서라기보다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 관계로 취업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사업시행을 통해 배출된 인력이 졸업 후 자신들이 교육받은 분야의 일자리에 취업해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지속적으로 충분한 연구와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대학들은 사업의 시행과 병행하여 지역의 인력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로서는 각 사업단으로 하여금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6)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5년 후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물론 바람직하겠지만 이번에 선정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해당 사업이 여전히 우수인력의 양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누리 사업에 의한 정

부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생력을 갖는 프로그램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7)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항이다. 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철저한 사전 및 사후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국고지원금이 낭비되거나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사전감독을 위해 사업단의 운영위원회 등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② 현장실습이나 인턴십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들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실습 또는 인턴십 관련 일지 또는 주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습이나 인턴십 기간이 종료된 후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울러 대학별로 학생들의 경험 발표를 포함하는 자체 평가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③ 사업 시행과 관련된 제반 자료들을 체계적, 안정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맺음말

누리사업의 성공의 관건은 경쟁력 있는 인력의 양성과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 창출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

부의 지원과 함께 대학과 여타 지역 주체들 간의 협력 및 연계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대학과 여타 주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다. 이들 방안들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들이 범정부적으로 이들 조치들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1) 기업체의 대응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공공기금의 창설
- 2) 지역발전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에의 대학 인사의 참여
- 3) 지역 산업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지원
- 4) 지역 산업체가 대학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들 서비스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
- 5) 학생 및 교수의 창업에 대한 정부지원
- 6) 기존의 기업에 의한 창업 및 분사에 대한 정부지원

다시 말해서 정부가 지역대학으로 하여금 ① 산업체와의 상호작용의 강화 ② 고급기술의 개발 ③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과 지식의 전파 ④ 졸업생들의 취업가능성의 제고 ⑤ 산업체와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의 인식 등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산업체간 상호작용과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은 대학간 협력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대학간 협력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누리사업에서는 대학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별 사업단에 다수 대학의 참여를 권장하였다. 선정된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

들간에 실질적인 협력과 제휴가 이루어질 때 해당 사업의 성공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대학간 협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과 여타 지역 주체들 간, 그리고 대학들 간의 협력은 선정된 사업계획서에 이미 부분적으로 포함된 내용이 되겠으나 교육인적자원부로서는 향후 각 사업단의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를 통해 이러한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무쪼록 누리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대학교육**

류기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에서 석사학위를,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관리위원회 위원, 충청북도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는 『호주의 실업자 지원정책』, 『살아있는 경제학』, 『지역노동시장연구』, “고졸근로자의 대학진학양상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의 실업대책과 실직자의 재취업”, “취업형태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외 다수가 있다.